

혁신정책

ITIF, 美 차기 행정부를 위한 기술-경제 분야의 의제 권고 및 시사점

KISTEP 전략기획센터 김다은



ITIF, 美 차기 행정부를 위한 기술-경제 분야의 의제 권고 및 시사점

(2024.6.25. 전략기획센터 김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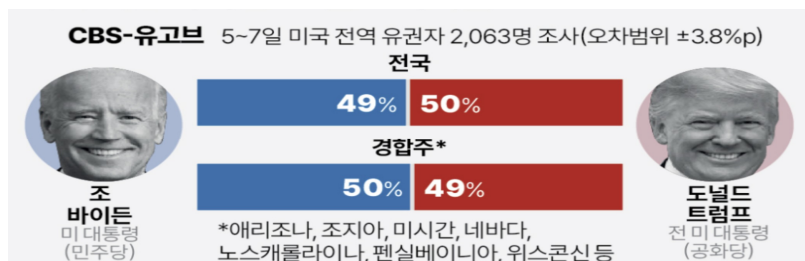
1 개요

- 미·중 간 전략경쟁,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등의 대외환경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의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공공 정책분야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2024년에는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특히 미국은 47대 대통령 선거('24.11) 및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의 1/3씩, 2년마다 선거)·하원(전체 의석 435석, 2년마다 선거), 각종 주, 연방 단위 선거가 함께 예정
 - ** 후보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였으며 2020년에 이어 대선 재대결 확정
- 대선을 5개월 앞둔 현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차기 행정부에 12개 주요 정책 영역 82개의 포괄적인 의제 제시
 - 특히 중국과의 기술·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역, 반독점, 연구개발, 제조업, 디지털 정책 등의 세부 의제를 제시하며 미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
 - 본 고에서는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차기 행정부를 위한 기술-경제 분야의 의제」 보고서 주요 내용

- 미국의 저조한 생산성, 첨단기술 제조업 공동화, 혁신 적용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기술-경제 정책 의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과 주도가 필수적임
- 현 양당 정당 후보들의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의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차기 행정부는 다음의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
 - * 공공지출, 재분배, 형평성, 시장 집중 완화, 녹색 전환에 초점
 - ** 작은 정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 규제 완화, 관세인상에 초점

〈그림 1〉 미국 대선 바이든-트럼프 지지율(출처: CBS-유고브, 24.6.15 발표)



- 중국의 기술 경제 발전에 제약을 걸기 위해서는 미국 자체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채택 가속화 및 첨단산업 비중 확대 및 빅테크 기업 지원 정책 필요

□ 12개 정책분야 및 82개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국가경쟁력위원회 설치)** 연방정부 차원에서 선진산업 경쟁력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기구인 국가경쟁력위원회(NCC)를 설치할 것을 제안
 - NCC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 분석 및 평가, 미국 리더십에 필요한 핵심 산업 부문(반도체, 제약, 항공우주, AI 등) 등을 식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임
 - 미국의 혁신, 생산성, 경쟁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전문 인력과 범정부적인 기구로서의 역할 강조
- ② **(예산 정책)**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증세와 지출 삭감을 병행하되, 기업과 생산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고, 사회보장 등 노인복지 지출 일부 삭감
 - 기업에 대한 세금은 늘리지 않고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산업의 허점을 제거하거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향상, 부족분은 노인수당 삭감으로 충당
 - 연간 1,000억~2,000억 달러를 혁신, 생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과 국제기술 경제 전략에 투자*
 - * 기업투자, 세제혜택, R&D지출, 첨단제조업 지원 등의 생산성 투자를 의미
- ③ **(조세 정책)** R&D 투자,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배당·탄소 과세 강화를 통해 혁신과 생산성을 제고
 - R&D 세액공제율을 일반공제(20%→40%), 간이공제(14%→28%)로 인상하며, 스타트업의 환급 가능 공제 확대, 자본 장비 투자에 대한 첫째 전액 공제를 영구화하고 투자세액공제 신설
 - 배당소득에 대한 정당 과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인 제고, 탄소세 도입으로 청정에너지 혁신과 보급 촉진 및 세수 확보, 반도체,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는 ‘슈퍼칩(Super-Chip)’ 투자세액공제 신설 제안
- ④ **(외교 정책)** 중국의 기술패권 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기술-경제적 협력과 미국 이익수호를 위한 새로운 외교 정책 필요
 - EU와 새로운 대서양 횡단 G2를 구성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하며,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 제한, 미국이 지원하는 국제기구도 이러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도록 유도
 - * USTR 301 감시 목록 국가, 데이터 현지화 국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등
 - 기존 기술-생산 및 무역동맹(NATO 등)을 강화하고 주요 동맹국과 긴밀한 기술협력 파트너십 구축, 미국의 가치와 더불어 기술-경제적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전략 수립

- ⑤ **(무역 확장)** 무역 확장을 위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고 북미 통합 정책을 추진하되, 중국의 불공정 행위 견제 및 공정무역 보장 필요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이 필요하며, WTO 디지털서비스 무관세화를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
 -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통합된 북미 생산시스템 구축과 첨단기술 제품 무역에 대한 무관세를 부과하는 '혁신 무역협정'을 체결
 -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와 AI 관련 데이터 협력을 위해 동맹국과 새로운 협정 마련
- ⑥ **(무역 강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다자간 대응, 국내 무역 규제제도 강화, 對중국 수출 확대 필요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의 중상주의, 불공정 무역, 국내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문서화 한 '중국 세부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관세법 337조를 개혁해 상무부 장관에게 중국의 불공정행위 분석 및 문서화를 지시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함
 - * 사이버 공격, 지재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처벌 강화, FBI 예산 증액, 기업 제재 등이 필요하며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 확대
 - 관세 부과 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역상대국에 호혜적이어야 하며,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는 동맹국과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해 중국 대비 경쟁력 향상
- ⑦ **(수출 진흥)** 수출입 은행의 역할 확대, 고위급 지원, 정부 내 수출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무역적자 해소
- 수출입 은행의 재승인과 대출 권한 확대, 중국 기업과 경쟁 시 손실 허용, 동맹국 무기 수출 금융 지원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대통령 및 고위 관료의 해외 순방 시 미국기업의 수출 기회 적극 지원
 - 상무부 주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국가 수출 지원체계 구축
- ⑧ **(규제 정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과정에 이를 반영하고, 혁신 친화적 규제를 만들어 기존 규제를 완화 또는 개혁 권고
- 예산관리국(OMB) 산하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에 혁신 및 경쟁력 영향 평가 전담 부서를 신설해 새로운 규제가 혁신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관들이 혁신 친화적 규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
 - 모든 연방 정책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 규모 중립성' 원칙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기술 분야*별 혁신 친화적 규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접근법 확산
 - * (AI) 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자율주행) 연방 철도청에 자율주행 트럭, 열차 등 화물 자동화 기술을 지원하는 규정 마련 지시, (드론) FAA 드론 운용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여 상업적 드론 활용 권고, (의약품) 가격통제정책으로 인한 신약 개발 저해 지적 및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시정 촉구, (도시 지역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법 면제 등 근본적인 개혁 추진

- ⑨ **(독점금지법)** 대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과 대중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반독점 규제를 완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권고
-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불공정경쟁 규칙 제정 권한을 제한하고 기존에 결함이 있는 법 폐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간 방산업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하며, WTO에 경쟁 챕터를 신설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독점 정책 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⑩ **(디지털 정책)** 디지털 정책의 방향성을 혁신 촉진과 공익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광대역, 데이터 보호, AI, 디지털 단일시장 등에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
- 광대역 정책의 초점을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보편적 연결성 지원으로 전환하고, 전파정책 개선 및 상업적 이용 확대
 - 연방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AI 로드맵을 수립하여 생성형 AI 등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Section 230 면책 범위 확대
 - 연방 최고기술책임자(CTO) 주도하에 건설, 국방 등 분야별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 ⑪ **(R&D, 기술 및 제조 정책)** 주력 산업 육성,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제조업 기반 강화,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미국의 기술-경제력 재건
- 바이돌법을 수호하여 연방기금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제약, 항공우주 등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산업 경쟁력에 맞추어 조정
 - 국방 및 민군 겸용 산업 기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비동맹국 의존 저감
 - 신약 개발과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산학연 R&D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예산 배정 및 CHIPS Act와 유사한 제약 생산시설 인센티브 법안 마련
 - 동맹국 STEM 석사 유치 및 산업(Industry) 기술 교육을 포함하는 STEMI 이니셔티브 수립
 - NSF에 산업 수요 연계 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강화할 인사 임명
- ⑫ **(청정에너지 혁신 정책)** 혁신적인 청정기술 개발을 통해 규제나 보조금의 단기적 방법이 아닌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의 R&D 투자 확대와 국제적 공조 필요 강조
- 녹색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와 가격 및 성능 동등성(P3)에 도달하는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초기 R&D 지원, 시범사업, 규모 확대 등의 정책 설계 필요
 - 타 국가도 청정에너지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압박해야 하며, 특히 Mission Innovation Alliance 회원국이 청정에너지 R&D에 GDP의 0.075% 이상을 지출하도록 의무화
- 그 외에도 연방정부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디지털 기술 활용, 조직/인력 개편, 규제 혁신 등 다각적인 정책 제안
- 경제자문위원회(CEA)를 기업혁신 중심의 경제역량자문위원회(CEECA)로 개편하고 모든 주요 부처에 혁신, 생산성, 경쟁력 제고 전략 수립 의무화

3 시사점

- 미국은 경쟁국인 중국의 기술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에 대응하고 미국 내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생산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 선진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R&D 투자와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기술 기반 대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보임
 - 분야별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며, STEMI 등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양성 및 교육 제안

- 중국의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긴밀한 기술적, 경제적 협력을 강조
 - 유럽,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 등 다자 간의 긴밀한 외교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견제 강화 추진
 - 무역에 있어서는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중국 대비 경쟁력 향상의 중요성 제시

- 디지털 정책에 있어 광대역, 데이터 보호, AI 로드맵 수립을 통한 신기술 서비스의 면책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의 확립을 강조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R&D 투자 확대와 국제적인 노력을 유도
 - 기술 기반 경제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과 건설, 국방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의 필요성 제시
 - 청정에너지 관련 R&D에 국가 GDP의 일정 부문 이상을 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모 확대를 요구

- 한국의 경우 향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무역·관세, 산업정책, 투자, 제재·수출, 친환경·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있어 다각도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야별 환경변화에 따른 통상 정책 마련 필요
 - 미국이 중국의 기술 패권 추구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으므로, 한국도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드맵 등에 기반한 초격차·융복합 기술 확보 및 전략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국제 공동 연구 기반 구축이 필요
 - 향후 전략기술 분야별 잠재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전략 기술 국제협력 지도를 완성해야 하며, 전략기술 협력에 대한 매핑과 동시에 글로벌 R&D 협력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 필요
 - 미·중 경쟁이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 산업 육성 정책의 부활, 중국 배제 공급망의 진영화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향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공급망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공급망 대응 전략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분석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 마련과 동시에 연구개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함
- 핵심기술의 육성,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 생성형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선도기술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STEM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제고
 - 전략기술과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산업의 기반 산업 적용을 견인하는 규제 혁신 법령 정비 추진
 - 글로벌 딥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생태계 마련 및 지속적인 지원
- 대통령 후보별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과학 기술적 관점에서 한국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비교 분석한 시나리오와 전략 마련 필요
 - (바이든 재선 시) 反독점으로 빅테크를 향한 규제가 이어질 것이며, 친환경 정책으로 석유 기업 등에 높은 세금 부과 예정
 - (트럼프 재선 시) GAFAM(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으로 2차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공통) 반중 정책, 자국 우선주의, 인프라 투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5G 인프라 확충 등의 기조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참고문헌

- ITIF. A Techno-Economic Agenda For the Next Administration. 2024.6.10.
- Trump Agenda-47(<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 접속일: 2024.6.18.
- 법률신문, '2024 미국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2024.3.6.
- 산업연구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위기인가 기회인가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176), 2024.6.5.

참고 1

美 대선후보의 과학기술분야 공약 비교

-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 및 확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접근 방식은 차이를 보임
- **(바이든)** 미래산업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청정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리더십 강화 등이 공약의 주 내용
 - 정부의 R&D 직접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미국과의 R&D 협력, 특히 청정에너지, 기후 기술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
- **(트럼프)** 인공지능 투자 확대, 첨단 원자력기술 지원 외 사회 기반 시설 등 직면한 현안 과제 해결 분야 우선 지원 등이 주 내용
 - Made in America(Manufacturing USA) 정책 기조 속 설비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으로 해외기업 투자 유치 확대 지속 전망

〈표 1〉 미국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 비교

주요 이슈	바이든	트럼프
대중국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리스팅(De-Risking) - 현행 관세를 유지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 중국에 최고 60%까지 관세 부과
통상/경제/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국제주의 기반 정책 - 무역전쟁 지양 및 점진적인 정책 변화 - 러·우 전쟁 장기 지속 - 동맹 연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간,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중국 견제 - 반중 정책과 관세율 증가 가능성 - 러·우 전쟁 단기 종결, 고립주의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생산 및 그린 뉴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제조업 부활 - 그린뉴딜(Green New Deal) 폐지 - 대중국 탈동조화 - 온쇼어링(On-shoring)한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 강조 -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 및 셰일혁명 기반의 석유, 가스 에너지 등 전통적 에너지 자원 중요 - 천연가스 수송망 확충과 LNG 수출설비 확충을 추진하여 에너지 수출 추진 - 첨단 원자력 기술 지원
연구개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PS 보조금 확대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PS 보조금 유지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공통)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차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 에너지 효율적 주택 및 공공주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기후협정 탈퇴 - 친환경 규제 완화

* 후보별 홈페이지 참고, 저자 정리

[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112 (24.01.08.)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진영현·오세미 (KISTEP)	기술주권
113 (24.01.12.)	2022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이새롬·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114 (24.01.12.)	2022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이새롬·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 (24.01.22.)	KISTEP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강현규·이민정 (KISTEP)	이슈페이퍼 (제357호)
- (24.01.25.)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박재민·문해주·김수민·박서현 (건국대학교) 이호규(고려대학교) 강승규(한국조달연구원)	이슈페이퍼 (제358호)
115 (24.01.25.)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4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미화 (KISTEP)	혁신정책
116 (24.01.25.)	기후변화와 기후 지구공학	정의진·임현 (KISTEP)	미래예측
117 (24.01.26.)	단백질 구조예측 및 디자인	전수진·한민규 (KISTEP)	기술동향
- (24.01.29.)	신약개발 분야 정부 R&D 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	송창현·엄익천(KISTEP) 김순남(국가신약개발사업단) 이원희(유한양행)	이슈페이퍼 (제359호)
- (24.01.31.)	반도체 분야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김준희·엄익천(KISTEP) 오승환(경상국립대학교) 전주경(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슈페이퍼 (제360호)
118 (24.02.01.)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미래 연구수행 모습	이상남 (KISTEP)	미래예측
119 (24.02.13.)	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강진원·김혜나 (KISTEP)	혁신정책
- (24.02.15.)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박창현 (KISTEP)	이슈페이퍼 (제361호)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 (24.02.29.)	과학기술 전공자 취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이정재·박수빈·이원홍 (KISTEP)	이슈페이퍼 (제362호)
120 (24.03.07.)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황인영·정정규 (KISTEP)	혁신정책
121 (24.03.19.)	2022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김용희 (KISTEP)	통계분석
122 (24.03.20.)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의 과학기술 동향	임현지·이가원·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123 (24.03.27.)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격년 보고서(2022년 NSTC ISTC)’의 이행사항 점검 결과와 시사점	도계훈·강진원·김혜나 (KISTEP)	혁신정책
124 (24.04.01.)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연구데이터 정책과 시사점	이민정·송창현 (KISTEP)	혁신정책
125 (24.04.01.)	안전·신뢰 AI	구본진 (KISTEP)	기술주권
- (24.04.04.)	토픽모델링-회귀분석 기반의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및 예측	오건웅·홍미영 (KISTEP)	이슈페이퍼 (제363호)
126 (24.04.08.)	2022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김용희 (KISTEP)	통계분석
127 (24.04.15.)	2022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김종란 (KISTEP)	통계분석
- (24.04.24.)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주원·김종란 (KISTEP)	이슈페이퍼 (제364호)
128 (24.04.25.)	비만치료제(Anti-Obesity Drugs)	김주원·이민정 (KISTEP)	기술동향
129 (24.05.07.)	새로운 경제 시대를 위한 성장의 질적 측정 - The Future of Growth Report 2024-	김용희·변영호 (KISTEP)	통계분석
130 (24.05.14.)	2024년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강진원·김혜나 (KISTEP)	혁신정책
131 (24.05.16.)	일본 CRDS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전략적 자율성 및 과학기술외교·인재확보를 중심으로 -	정여진 (KISTEP)	혁신정책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 (24.05.30.)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오현환·김유신·주혜정, 배용국·김지홍·김효재, 이충현·오서연·김인자, 박수빈·기지훈 (KISTEP)	이슈페이퍼 (제365호)
132 (24.05.30.)	OECD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주혜정 (KISTEP)	혁신정책
133 (24.06.03.)	감염병 백신·치료	한민규 (KISTEP)	기술주권
134 (24.06.05.)	우주바이오(Space Biology)	이재민(KISTEP) 송대근·강경수(KIST) 장은혁(메디멤바이오)	기술동향
- (24.06.05.)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윤수진·손영주 (KISTEP)	이슈페이퍼 (제366호)
135 (24.06.11.)	디지털 경제의 현재와 미래 -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4 -	정하선 (KISTEP)	통계분석
136 (24.06.13.)	중국의 과학기술 동향	조진실·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137 (24.06.14.)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및 시사점	이미화 (KISTEP)	혁신정책
138 (24.06.21.)	초순수(Ultrapure Water)	이현경(KISTEP) 부찬희(KAIST)	기술동향
139 (24.06.25.)	ITIF, 美 차기 행정부를 위한 기술-경제 분야의 의제 권고 및 시사점	김다은 (KISTEP)	혁신정책